

# “尹,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

### 전북 시장·군수들 “탄핵은 국민의 명령” 국힘을 향해 “내란 동조... 당장 해산해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계엄해제 선포로 정국이 어수선하고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어 국민의 우려가 큰 가운데 전북의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윤석열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장과 군수 14명 중 11명이 9일 오전 10시30분 전북도회 브리핑실에서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정현을 익산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는 것을 보며 전 국민

이 침묵하고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총리와 함께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의 혼란 상황은 수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런 저런 구실로 시간만 끌고 있다”며, “국회도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많이 벅차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나서 힘을

보태야 할 때”라며, “5.18 광주민주화항쟁 때 광주시민이 맨손으로 군사독재를 막아냈듯이 이번에는 전북도민이 선봉이 되어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당장 해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이 차가운 거리 위에서 다시 촛불을 들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협의회장은 “위태로운 국가안보와 외교상황, 급락하는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호해 온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권력으로부터 붕괴될 수 있다는 현실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계실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탄핵뿐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끝까지 정권유지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잘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도민들과 연대하여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무엇보다 도민의 안정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위 탄핵을 끝까지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1명의 단체장은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즉각 정당 해산하라!”고 외쳤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난 6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 “호남동행의원 제도 폐지해야”

### 오현숙 도의원, “내란수괴 후계 자처하는 국힘 의원에 대한 명예도민증 부여는 수치”



내란수괴 보좌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내란부역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는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정의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표결조차 참여하지 않은 내란 부역 정당인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제도를 거부한다”라며, “전북자치도가 호남동행의원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9월 국가예산 최대 확보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당시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국힘 호남동행의원 1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실제 오현숙 의원은 지난 394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전북자치도가 국민의힘 동행의원 19명에게 명예도민증 수여를 명시한 동의안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라며 반대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호남동행의원들의 행태는 전북의 발전과 예산확보에 도움은커녕 전북 현안마다 발목을 잡았고, 막달도 서슴지 않았으며, 이번에는 전 국민을 기함하게 만든 위헌적인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마저 표결을 거부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실제 전북동행의원 중 서병수, 김병욱 의원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의 의원에 포함된 인사들이고, 상임종 의원은 정부가 공모한 국립 호남권청소년년대센터에서 광주광역시가 탈락하자 이를 사실상 부활시켜 정작 공모에 선정된 익산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또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프버리 사태에 따른 새만금 SOC예산과 관련해 송언석 의원은 전북을 예산 빼먹는 파렴치한에 비유했고, 전주 동행의원이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경우 현재 전북지역 현안 중 하나인 ‘제2 중앙경향대학교’ 설립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인 충남 지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현숙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중에 금번 내란 수괴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전북자치도의 동행의원이라는 점과 이들에게 명예도민증까지 수여한 사실이 수치스럽다”라며, “전북자치도는 이들 내란죄 공범인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와 함께 이들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에 대한 취소 절차를 즉각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하반기 고액체납자 10억원 압류·7000만원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하반기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333명으로부터 10억3,700만원을 압류하고, 11명에게서 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증권 등 금융자산을 조회·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압류된 금융재산은 당사자에게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에금·적금·보험금 등은 만기 도래 시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250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 계속 은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액수색, 동산 및 건설기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 광역징수반을 가동하여 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컨설팅,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압류, 타 시군과 협력한 가액수색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체납자 재산 추적과 징수 활동을 통해 도민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구속!” 윤석열퇴진전북은동분부 관계자들이 9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구속!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하야 통해서만 가능”

### 이원택 민주 전북도당위원장 “尹 직무 정지 반드시 필요” 국힘의 ‘질서 있는 퇴진’에 “헌법 어디에도 없는 주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담화를 열고, 현재 정국과 당의 입장, 그리고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은 9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담화를 열고, 현재 정국과 당의 입장, 그리고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지난 3일 발동된 계엄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핵을 지지하며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내란은 작년부터 철저히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계엄 시도를 무력화하고 관련자들을 구속 및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윤석열 탄핵을 통과시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계엄과 내란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탄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범야권 192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는 “헌법 어디에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유고 시에나 가능한 권한 승계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과 하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계엄령 발동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12월 3일 밤 지지자로부터 계엄령 발동 문자를 받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뉴스를 확인한 뒤 바로 국회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190명의 의원들이 비상 소집되어 계엄령 해지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군과 경찰의 민주적인 태도로 무력 충돌 없이 계엄군이 물러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들이 예산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작년 예산이 677조 원이었고 올해 4.1조 원이 삭감됐지만, 이는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주된 삭감 원인이기 지자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의미 있는 예산안을 가져온다면 이를 반영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조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도민들이 느낀 불안과 분노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전북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내란 주동자인 윤석열과 공범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에서는 지난 주말 탄핵 정

국 가운데 객사 앞에서 추은 겨울임에도 다수의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동참해 불법 계엄과 관련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등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조국혁신당 도당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오직 탄핵”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8일 한덕수-한동훈 담화문에 대해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오직 탄핵과 사임”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긴급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와 한동훈은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여당과 정부가 수습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헌법에 없는 처사로, 우리 헌법이 규정된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오직 탄핵과 사임밖에 없다”며 “그 이외의 모든 방법은 위헌이다. 한덕수와 한동훈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관리자가 될 수 없다. 헌법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선관위경비대 신설, 계엄 재발 방지

### 민주 한병도 의원, ‘선관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9일, 선관위 경비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써, 선관위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근간으로 꼽힌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하는 등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약 300명의 계엄군이 청사를 통

제하고 직원의 출입을 막았지만, 청사 방호를 위해 근무 중이던 선관위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등 헌법기관으로써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사 방호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경비대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투버가 신봉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침먹는 행위다”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가짜뉴스가 비상계엄까지 이어질 정도로 민주주의를 중대한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헌법기관 선관위의 기초적인 방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2, 제3의 선관위 겁박, 자료 탈취 시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도내 읍면동 사회복지지 공무원 배치 현황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업회(회장 박주중)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장 사회복지직공무원 배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관건인 맞춤형 복지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황을 조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직 배치 현황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달 기준 14개 시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1,602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 2명(0.12%), 5급 54명(3.37%), 6급 364명(22.72%), 7급 490명(30.59%), 8급 437명(27.28%), 9급 255명(15.92%)으로 조사됐다.

243개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장 정원 및 현원은 245명이며, 직렬별 현원 현황은 사회복지직 120명(48.98%), 행정직 67명(27.35%), 간호직 5명(2.04%), 기타 보건 등 53명(21.63%)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맞춤형 복지팀장 사회복지직 배치율은 완주군 11명(84.62%), 무주군 5명(83.33%), 정읍시 20명(80.00%), 고창군 11명(78.57%), 김제시 10명(52.63%), 남원시 12명(52.17%), 군산시 14명(51.85%) 순으로 높으며, 진안군 1명(9.09%), 전주시 9명(25.71%) 순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만호 기자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 보수 감액 지급

### 민주 윤준병 의원,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대표발의



국회의 탄핵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헌법적 수단으로 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보수는 그대로 지급되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탄핵소추 의결은 파면 등의 징계 요건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헌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입법 미비로 인하여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만을 제외한 보수는 온전히 계속 받게 된다”며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해제와도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까지 당한 자가 계속해서 기존 보수를 온전히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의 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